

# 전남 신재생에너지 전담 인력 '전무'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건수 2년새 7.7배 증가 나주만 전담부서 22개 시군 업무 담당자 없어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이 폭주하는 전남의 기초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구) 의원이 집계한 현황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22개 전남 시·군에 전담인력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2개 시군 중 나주시에만 전담부서

가 있지만, 신재생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전체 시·군에서 단 한 명도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229개 기초지자체 중 9개만이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고, 전담 인력을 보유한 곳은 부산 기장군에 단 한 명뿐이다.

전남의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2015년에 899건에서 2017년 6,958건으로 2년 사이 7.7배 증가했으나, 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

을 드러낸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이나, 3MW 이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다.

광역 자치단체장은 이러한 허가권을 기초지자체에 재위임하고 있고, 최근 신규 태양광발전소의 90% 이상이 100kW 미만의 소규모 설비인 것을 비춰보면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권은 기초지자체가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자체별로 발전소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통해 태양광 등 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규제하고 있어, 전담인력의 필요성은 증가하

고 있다.

그러나 각 기초지자체에서는 가스·석유 등 타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부수적으로 담당하거나 보급사업은 경제부서에서, 태양광 인허가는 민원부서에서 각각 담당하는 등 전문성이 실정이다.

우원식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인허가 규제 또한 지자체의 조직과 인력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재생에너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와 인력을 확충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정기 브리핑

## 주승용 "2020년 4월까지 교통법 폐지 대체입법 통과"

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국회 부의장은 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에 대해 예외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주승용 부의장은 이날 경찰청 국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만들어진 지 40년이 흐른 지금, 법의 취지와 달리 국민들의 교통안전 불감증을 확산시키고,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 특례법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람이 죽지만 않으면, 뺑소니만 아니면, 종합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를 일반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 부의장은 "2020년 4월까지 목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장병완 "의료자문제도 보험사 보험금 지급거부 악용"

보험사 내부판단에 불과한 '의료자문제도'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장병완(광주 동남갑)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보험사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건수가 2014년도에 비해 2배 넘게 급증했고, 의료자문을 의뢰한 사례의 절반 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가 의뢰한 2014년 의료자문은 총 5만4,076건으로 이중 자문 결과를 인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9,712건으로 전체 30% 수준이었다.

하지만 매년 의뢰건은 증가했고 2017년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는 9만



2,27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의료자문제도'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료만을 바탕으로 자문하는 보험사 내부판단에 불과하며, 보험사가 이를 환자가 제시한 진단서 거부 용도로 사용한다면 '환자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 위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문제에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며 "관행을 타파하는 의료자문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으로 보험사의 과도한 갑질을 근절하고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삼석 "천일염 관리정책 원점서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양양·무안·신안)의원은 8년동안 924억원을 쏟아부었음에도 1/5도막난 천일염 가격을 지적하고 관련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11일 해수부 국감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금은 주무부처가 2013년 농식품부에서 해수부로 이관됐으나 농림부가 주무부처 일 때부터 8년간 924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천일염 가격이 1만1,222원에서 2,435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천일염 생산량은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 이관후 해수부 역시 724억원을 투입했다.

문제는 비축사업으로 총 125억원을 집행했으나 비축량은 고작 1만5,000톤에 불과했고 천일염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 수매사업 취지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매년 수매하고 있으나 양은 매우 저조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모두 방출했다. 실질적으로 비축되는 양이 매우 낮아 천일염 가격 지지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소금 시장도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43억원이었던 소금시장 규모가 2018년 302억원으로 1/4규모로 줄어 들었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의 소금산업발전 정책이 실패한 정책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침체된 소금산업 활성화와 소금가격 정상화, 판매활성화,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해찬 대표, 이시종 충북지사, 이준희 세종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광주시 제공

# 이 시장 "수영대회·광주형 일자리 지원 절실"

## 민주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서 현안 건의

이용섭 광주시장은 11일 국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광주 수영대회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김두관 참총은 지방정부 위원회 상임위원장, 최문순 참총은 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김대년 정책위의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이용섭 광주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11개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2019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업비 증액 등 추가 지원 ▲북한 선수단·응원단·공연단 참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모델

'광주형 일자리'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광주수영대회는 2019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국제대회인데도 국제대회와 비교해 예산 규모가 매우 적다"며 "성공적 대회개최를 위해 국제대회 지원규모와 소요비용을 감안해 총사업비를 538억원 늘리고, 국비 169억원을 추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이번에 '가을이 왔다' 북한 공연이 내년 광주수영대회 개최식과 폐회식이 열리는 장소에서 열리고 수영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면 국내외적 관심이 집중돼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이다"며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불씨를 틔우면 광

주수영대회는 북한 참여로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대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노동계가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하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문제는 서서히 좋아지고 서서히 나빠지고 하는데 현재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10여년 동안 경제체질이 많이 약해졌기에 그것을 갑자기 끌어올릴 수는 없

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꾸준히 노력해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일자리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심히 노력해야 만들어 지는데 제가 보기엔 바닥을 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일자리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텐데 시도지사께서 좀더 정성을 들이고 관심을 갖고 일자리 만드는 일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긴 했어도 분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조직이나 인사, 재정에서 분권을 대폭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수 기자

# "태풍 '콩레이' 신속한 보상 이뤄져야" 5대 국립예술단 공연 지방 소외 여전

## 민주당 전남도당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1일 태풍 '콩레이'의 신속한 피해집계와 재해보상을 촉구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농도 전남이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남긴 생체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피해 농어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급복구 지원과 함께 하루빨리 재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풍 '콩레이'로 인해 전남에서는 239여가 전복과 굴 등 5개종의 양식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신안·완도·진도·해남 등에서 김양식시설 1만7,035척이 파손됐고, 전복 양식장 1,700칸(완도), 굴 633중, 가리비 30줄(고흥)이 훼손 또는 유실됐다. 농작물도 1,672ha가 침수되거나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고, 사과 배 등 과수낙과 54ha, 비닐하우스 47동이 피해를 입었다.

서삼석 전남도당 위원장은 "완도와 신안, 진도 등 수산·양식시설의 피해가 커 어민들의 시름이 깊다"며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피해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일선 지자체들은 피해 집계가 늦어지지 않도록 현장 확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근산 기자

국립발레단 등 5대 국립예술단의 주요 공연이 여전히 서울·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예술단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립예술단의 453회 공연 중 82%(371회)가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지방의 공연 횟수는 대구, 대전, 전남이 각각 5회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4회, 울산 4회, 전북 2회 열렸다. 예향

과 문화의 도시인 광주는 1회에 그쳤다.

한해 500억원에 가까운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국립예술단은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지역 문화발전, 문화·예술 소외 지역 공연 등의 책임이 있다.

최경환 의원은 "모든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 그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문화적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며 "지역 문화격차와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이틀째인 11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앞바다에서 울곡이함(DDG-997, 7,600t)을 선두로 우리 해군 함정들과 P-3 해상초계기 등 항공기들이 대오를 맞춰 기동하고 있다. /연합뉴스